

제1회

융합경제생태계 FORUM

창업생태계 현황과 개선방안

2016. 9. 22 (목)
2:00 pm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 최

국회의원 이 종 구

주 관

한국창업지도사협회

목차

인사말

이종구 국회의원	4
----------	---

주제발표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	8
김영태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	41

토론

황보윤 국민대학교 교수	58
오승균 미래융합연구소 대표	63
장수진 JPD Big Data Institute 대표	67
황병선 빅뱅엔젤스 대표	75

제1회 융합경제생태계 포럼 인사말씀



국회의원 이종구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창업, 일자리, 미래성장동력 등 주요 분야에서 융합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창업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과 민생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한 경제환경 속에 혁신적인 신산업이 비선형적이고 복합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보다는 민간분야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그 속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이 성장하는 선순환적인 경제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 먹거리 발굴, 창업 활성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민간분야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융합경제생태계 포럼”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포럼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찾는 데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포럼의 성과가 좋은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주제발표

오태석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

김영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 창조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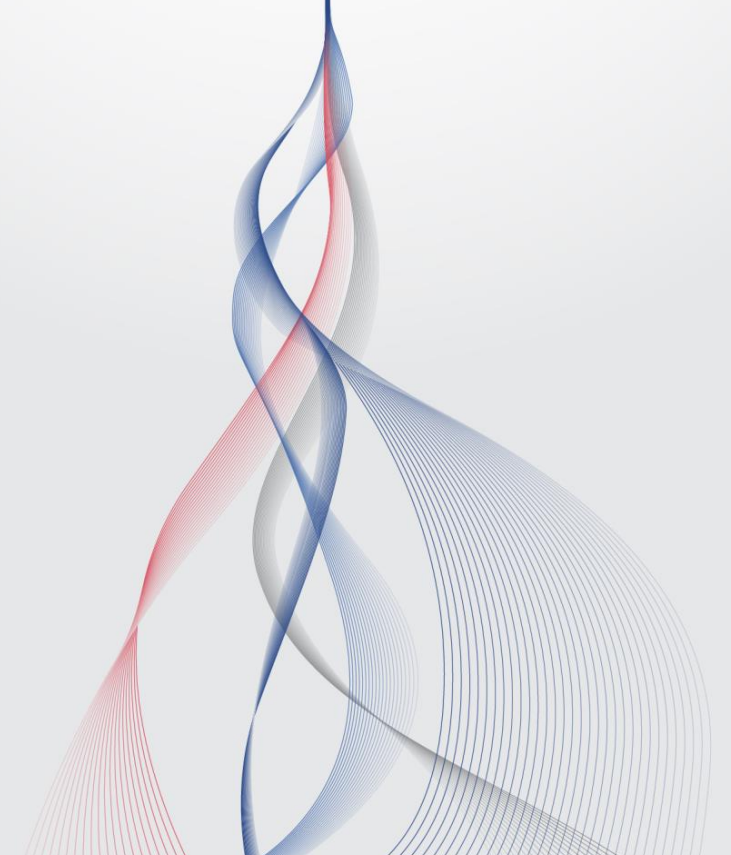
2016. 9. 22. (목)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 오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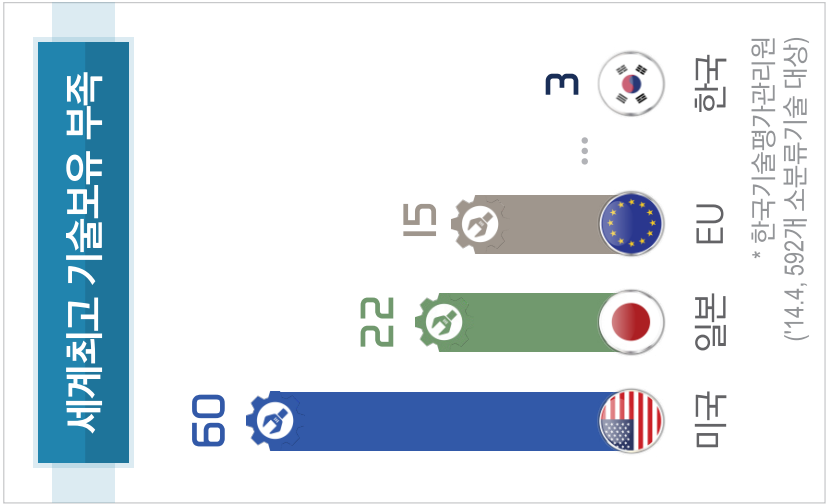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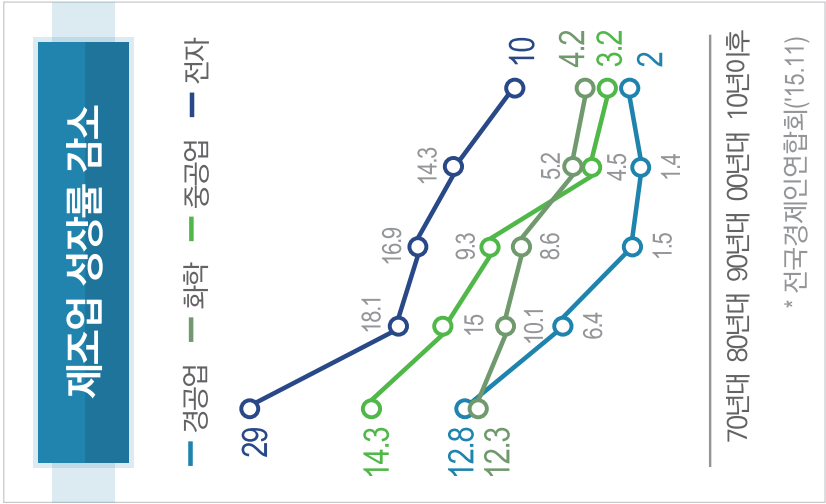
INDEX

- 01. 변화와 혁신의 길, 창조경제
- 02. 지난 3년 반의 노력과 성과
- 03. 향후 추진과제

변화와 혁신의 길, 창조경제



우리 나라의 경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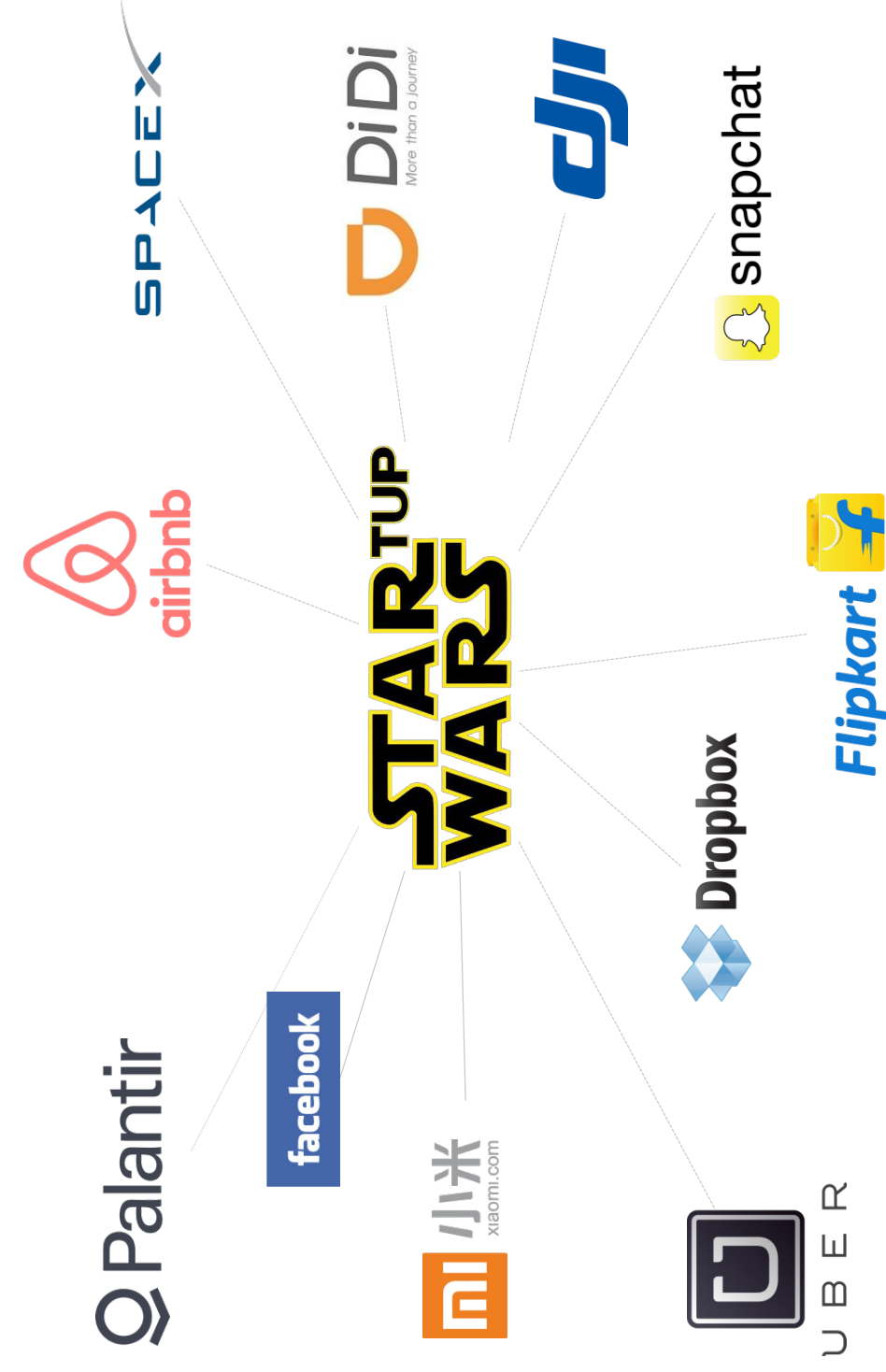


⇒ “ 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가 두렵다 ”

세계는 이미 혁신 경쟁 中

 Start-up America Remaking America ▪ 혁신의 상징 실리콘밸리 ▪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 ▪ Lab to Market	 신성장전략 ▪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통화확대 → 재정지출 → 구조개혁) ▪ 국가전략특구 중심의 규제개혁 ▪ 양트레 × IT (창업과 IT의 결합)	 창신행 국가 ▪ 大衆創業 萬眾革新 ▪ 제조업 2025 ▪ 인터넷+전략	 유럽 ▪ (영국) Tech Nation, Digital Britain ▪ (독일) Industry 4.0, 팩토리베를린 ▪ (프랑스) La French Tech
--	---	--	---

글로벌 창업 전쟁의勃發



변화·혁신이 답 : 창의·과학기술·ICT가 그 핵심이다!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한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창조경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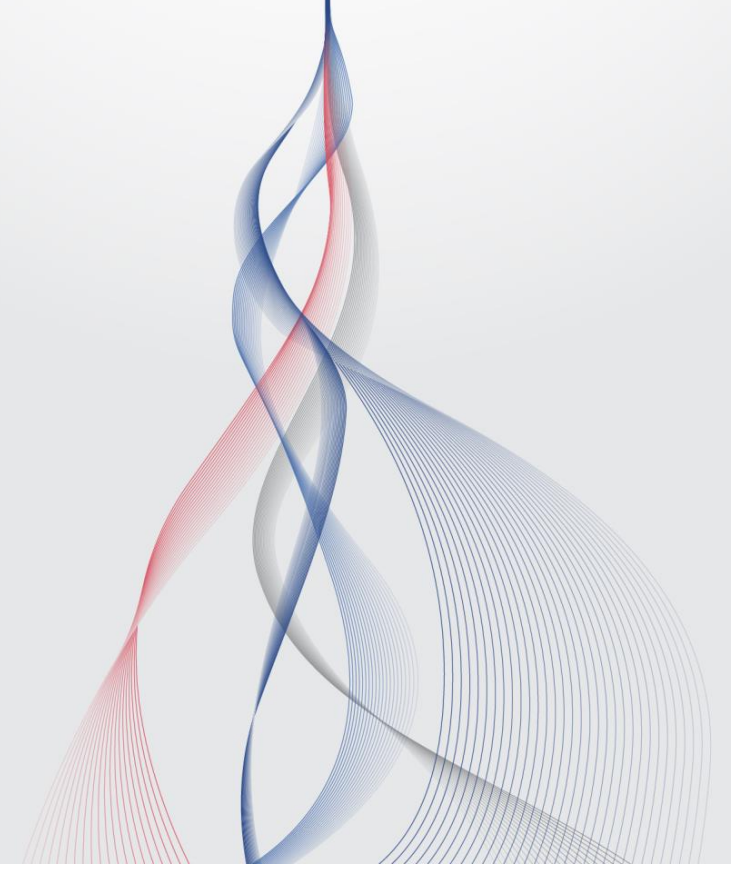
“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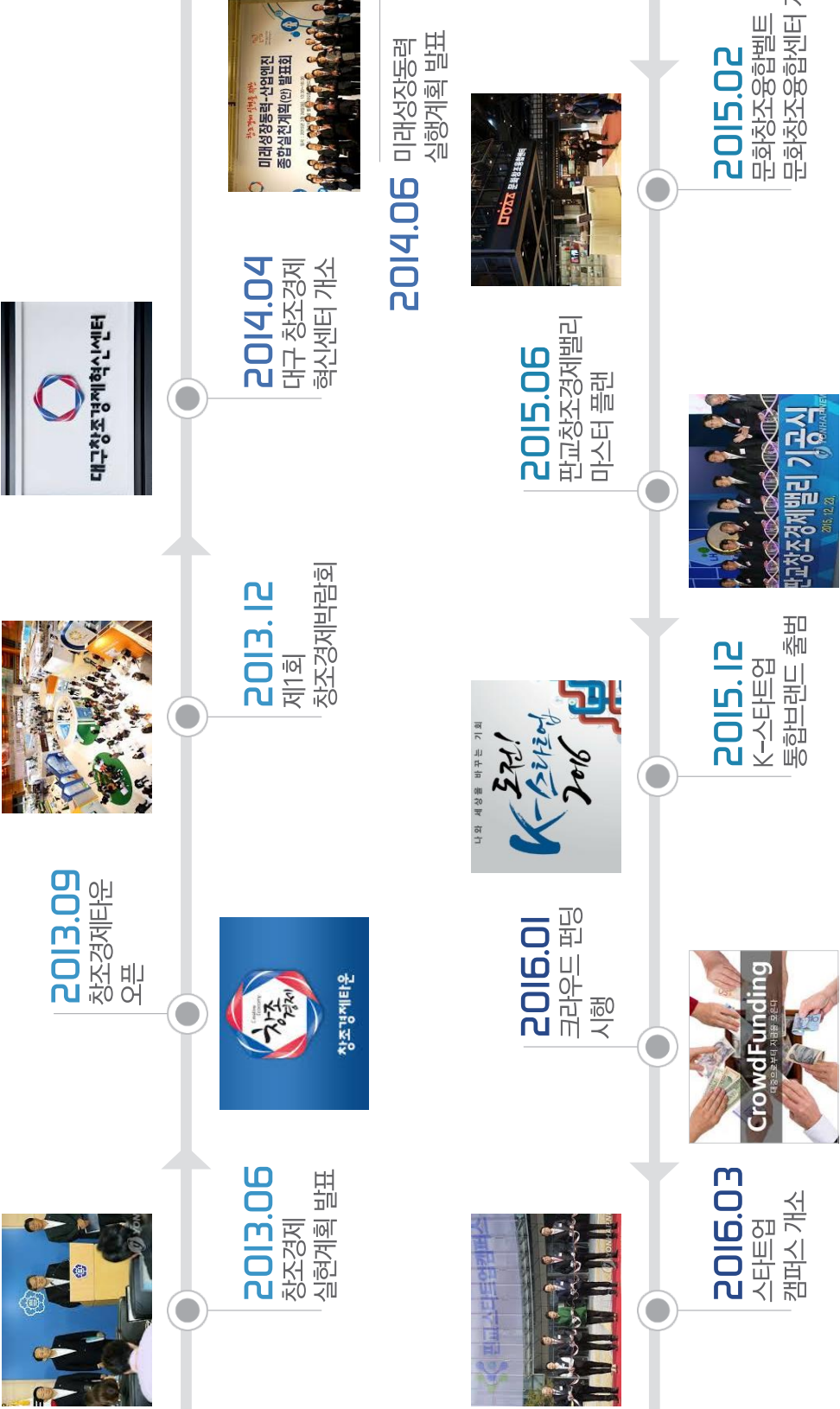
포켓몬고의 사례



지난 3년 반의 노력과 성과



그간의 주요 발자취



창조경제 정책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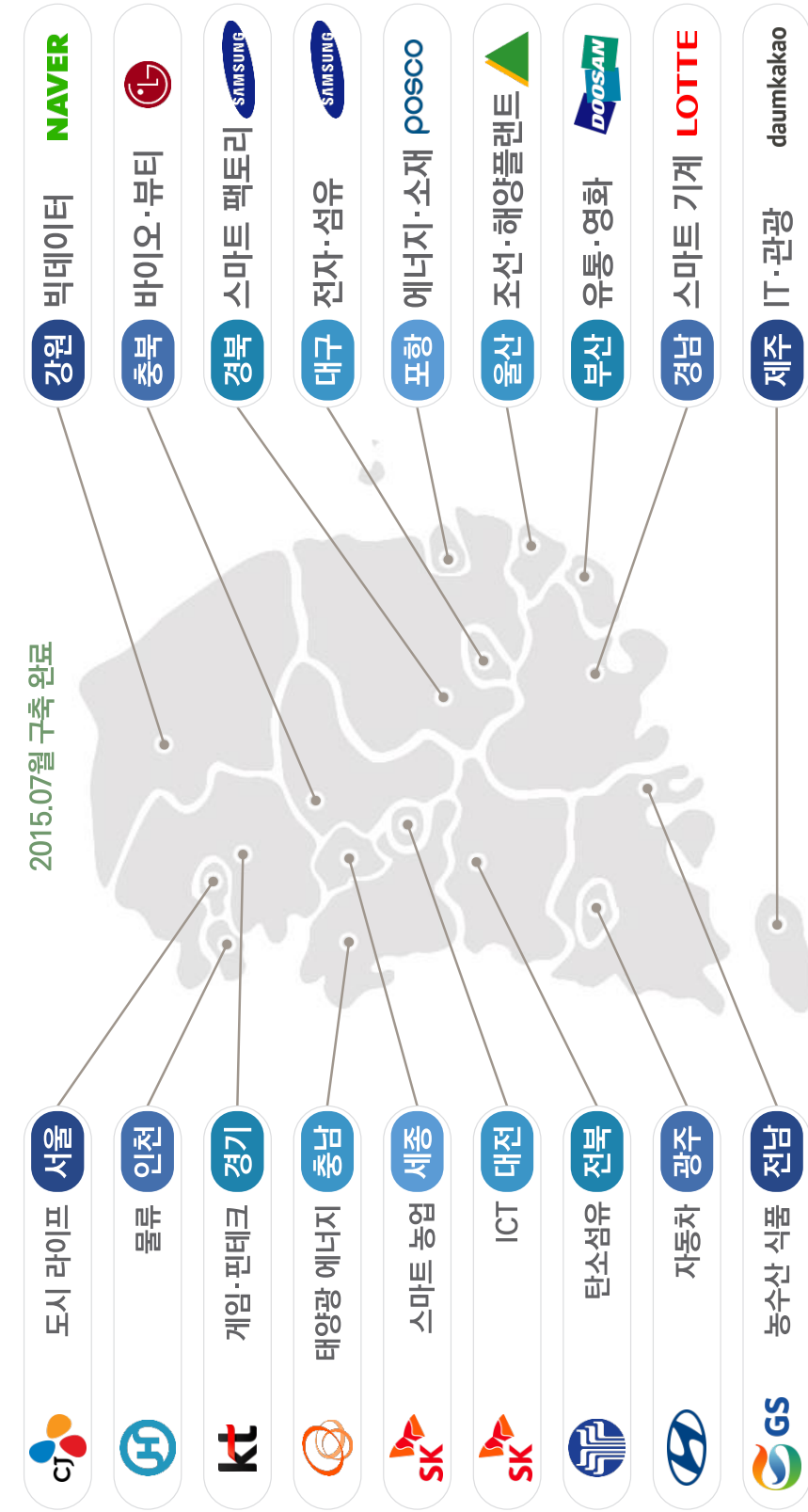


1. 창조경제 플랫폼 : 창조경제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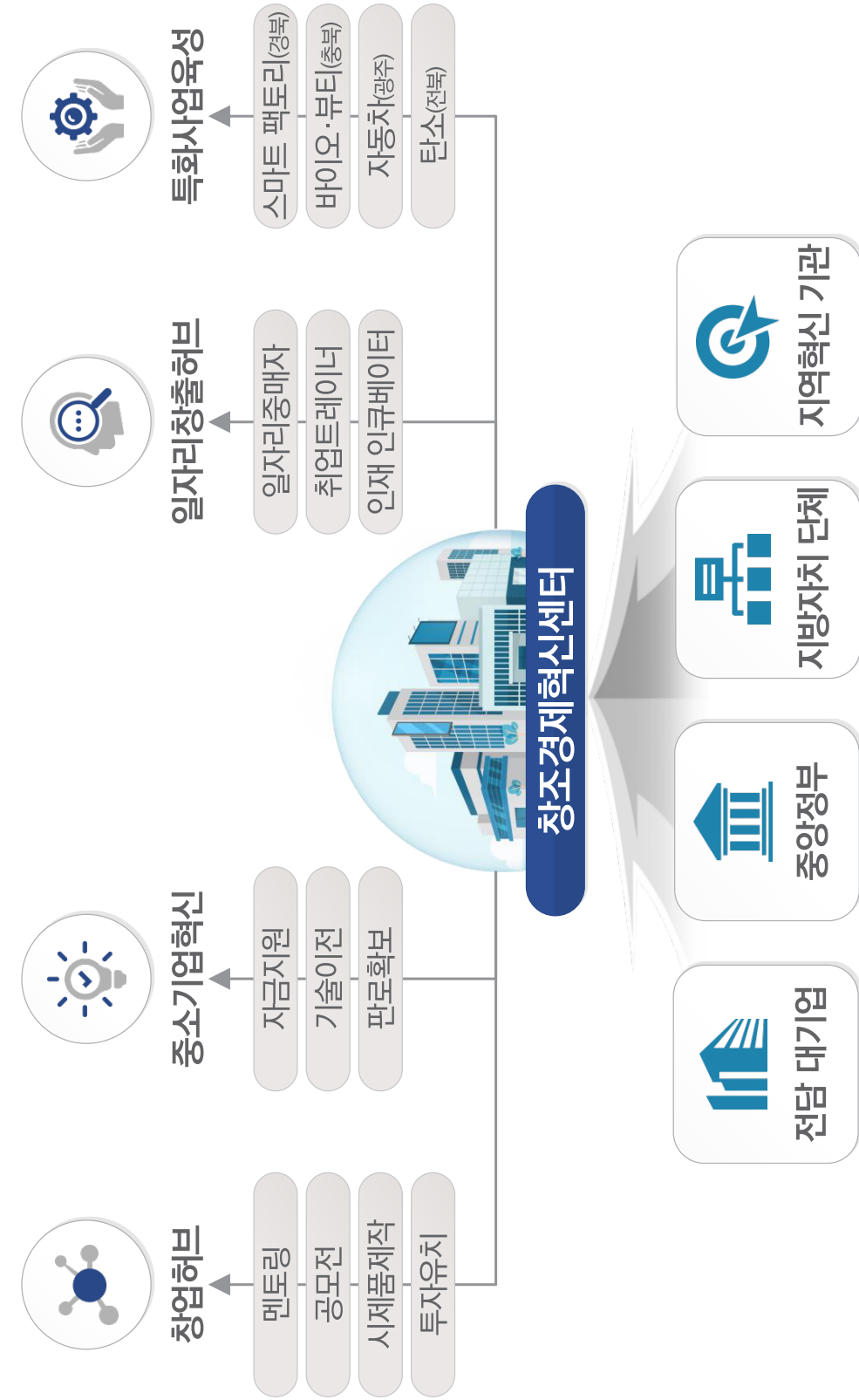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 → 사업화 시도

1. 창조경제 플랫폼 : 창조경제혁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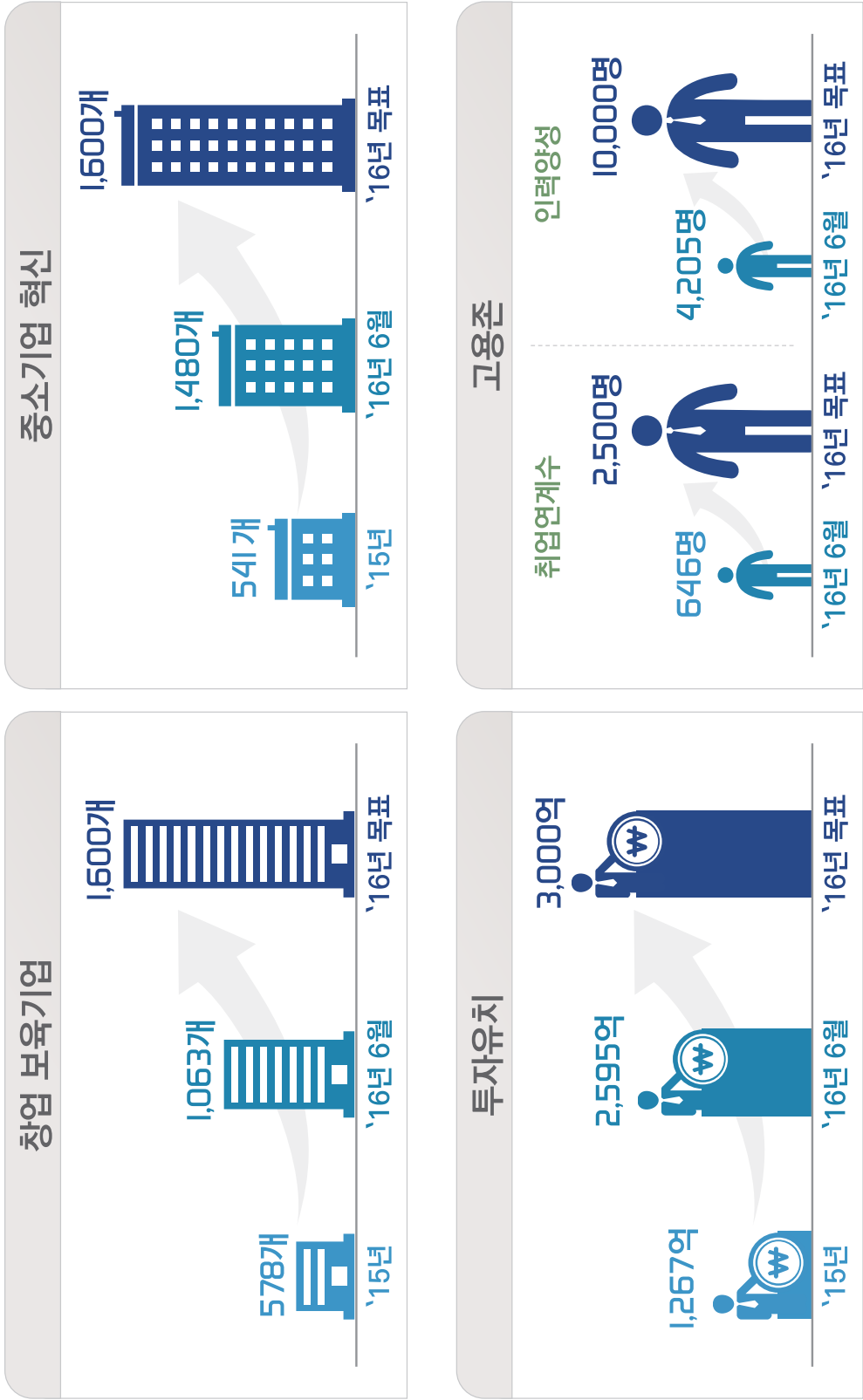


⇒ “ 전국 어디서나 찾아갈 수 있는 창업과 혁신의 Off-line 거점 ”

1. 창조경제 플랫폼 : 혁신센터의 기능



1. 창조경제 플랫폼 : 혁신센터의 성과



1. 창조경제 플랫폼 : 혁신센터 우수사례

01 Dot

점자 스마트워치
350억원 수출 계약



02 247

호신용 전기충격 스마트폰 케이스
독일 세계발명대회 특별상



03 아이리시스

홍채인식솔루션
이란 220억원 계약 완료



04 해보라

블루투스 이어셋
해외 크라우드 펀딩 178만 달러



05 테그웨이

유네스코 선정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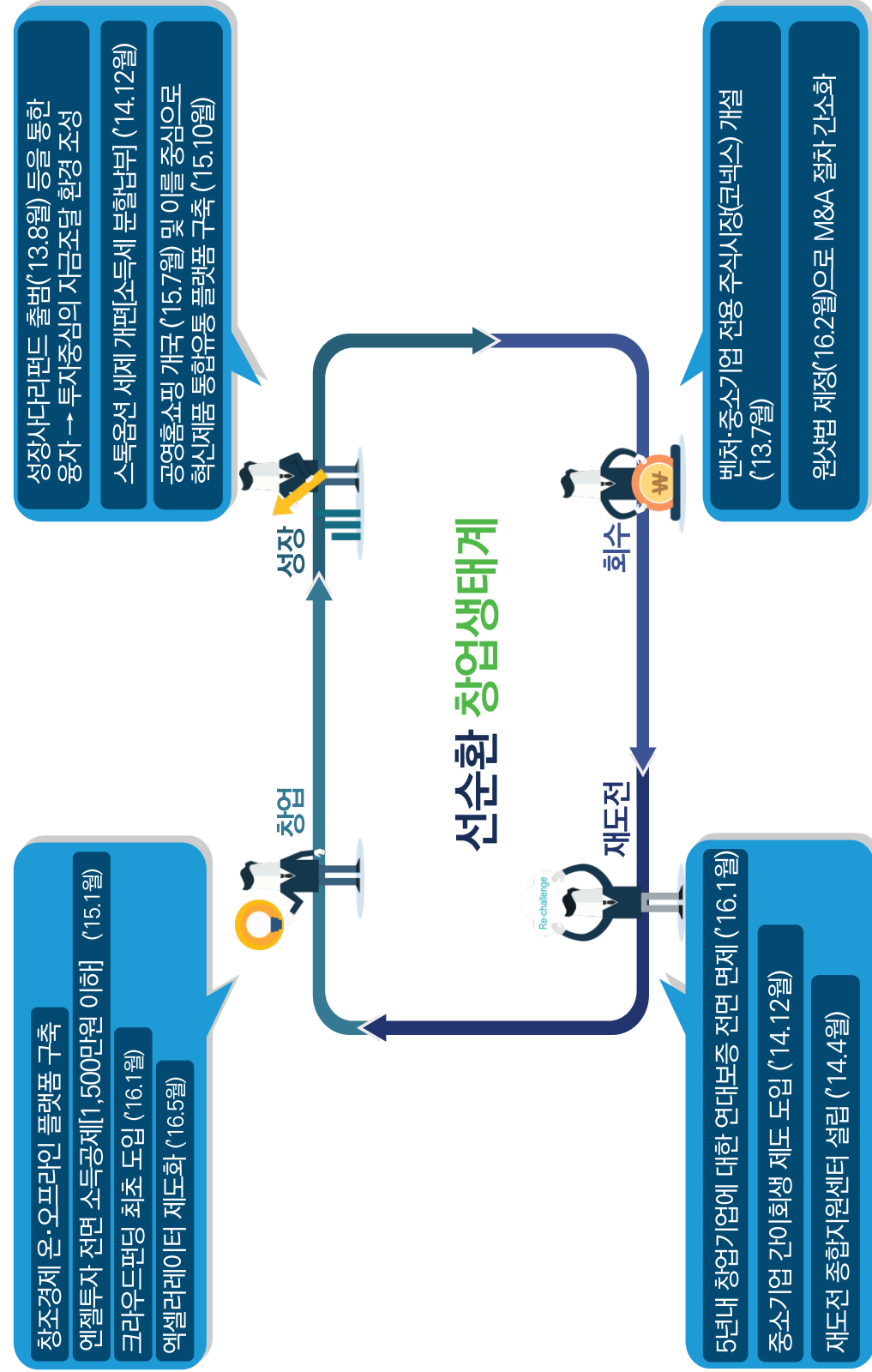


06 광주 송정시장

기존대비 15배 이상 방문객 증가
(일평균 약 3,000명), 매출 3배 증가



2. 창조경제 생태계 :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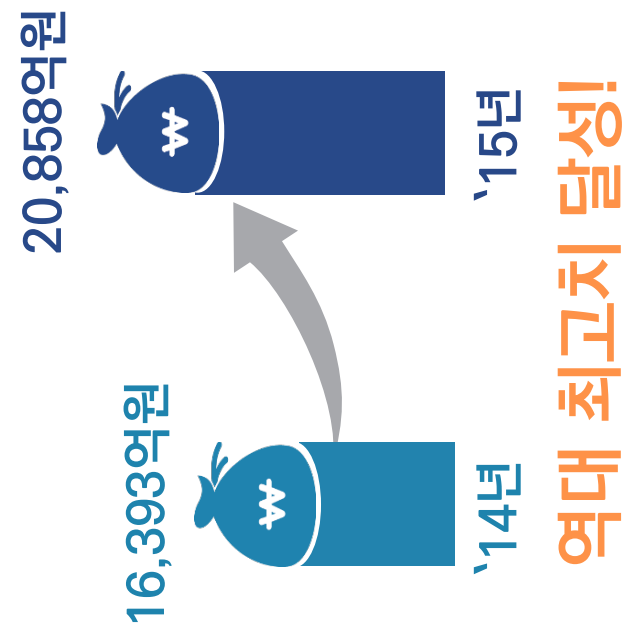


2. 창조경제 생태계 :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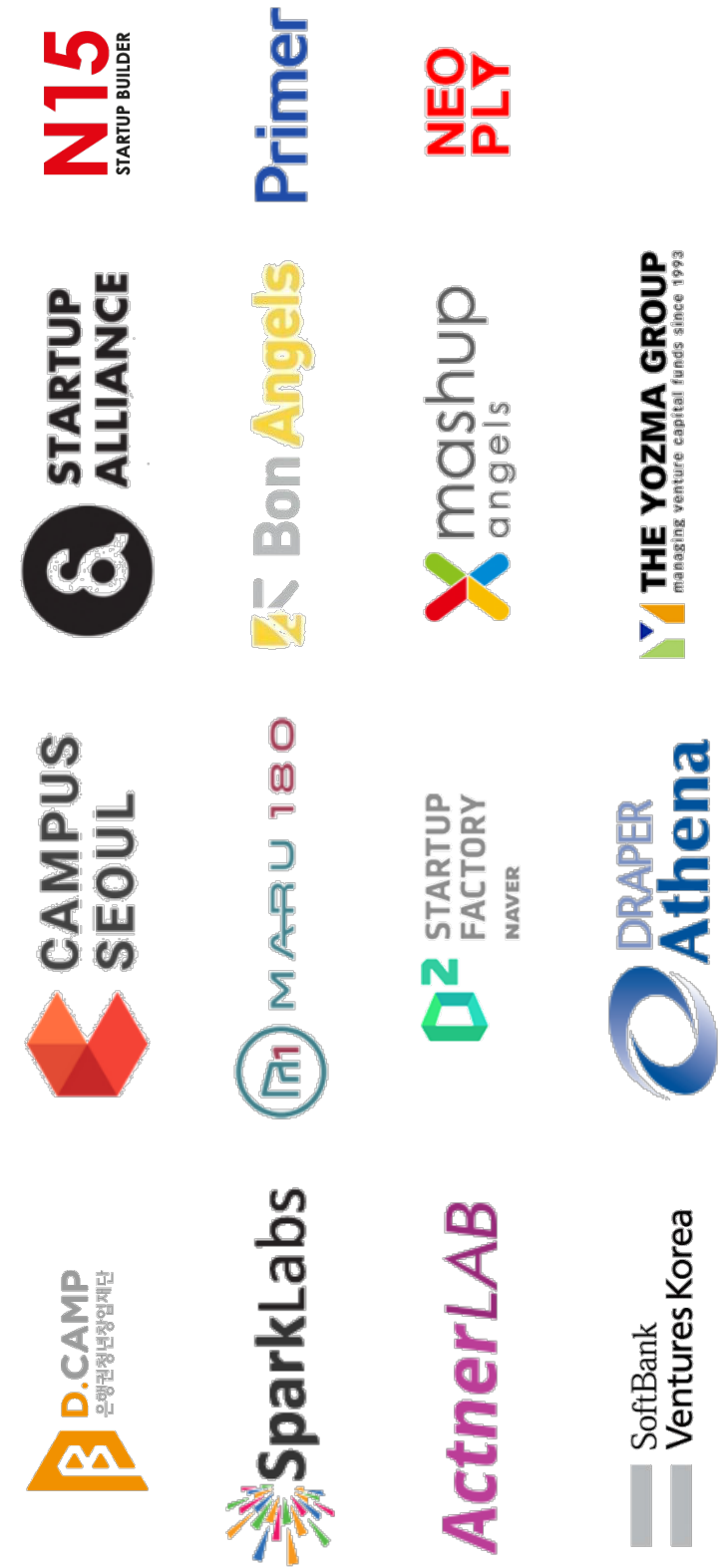
벤처 기업 수



벤처 신규투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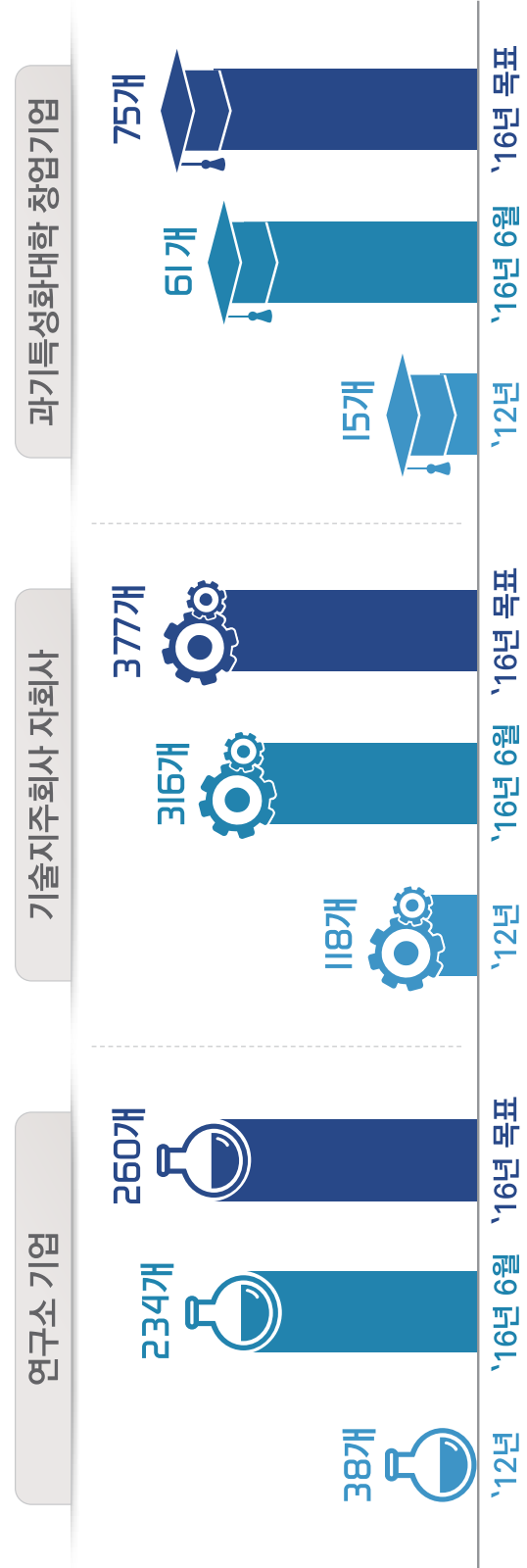


2. 창조경제 생태계 : 민간 자생적 생태계 조성



⇒ “ 코워킹 스페이스, 창업지원기관 등 활발한 민간 생태계 출현 ”

2. 창조경제 생태계 : 공공기술 사업화



콜마 BNH

연구소기업 최초코스닥 상장('15.2.3)

시가총액 1조 276억 원(상장일 기준)

- 제1호 연구소기업('06년 원자력연)
- 대박 연구원 탄생(100억원대 인센티브)



미코바이오메드

나노기술기반 바이오센서

미국 업체 등과 5,700만불 독점계약

- 제13호 연구소기업('09년 생명연)
- '16년 상반기 매출 44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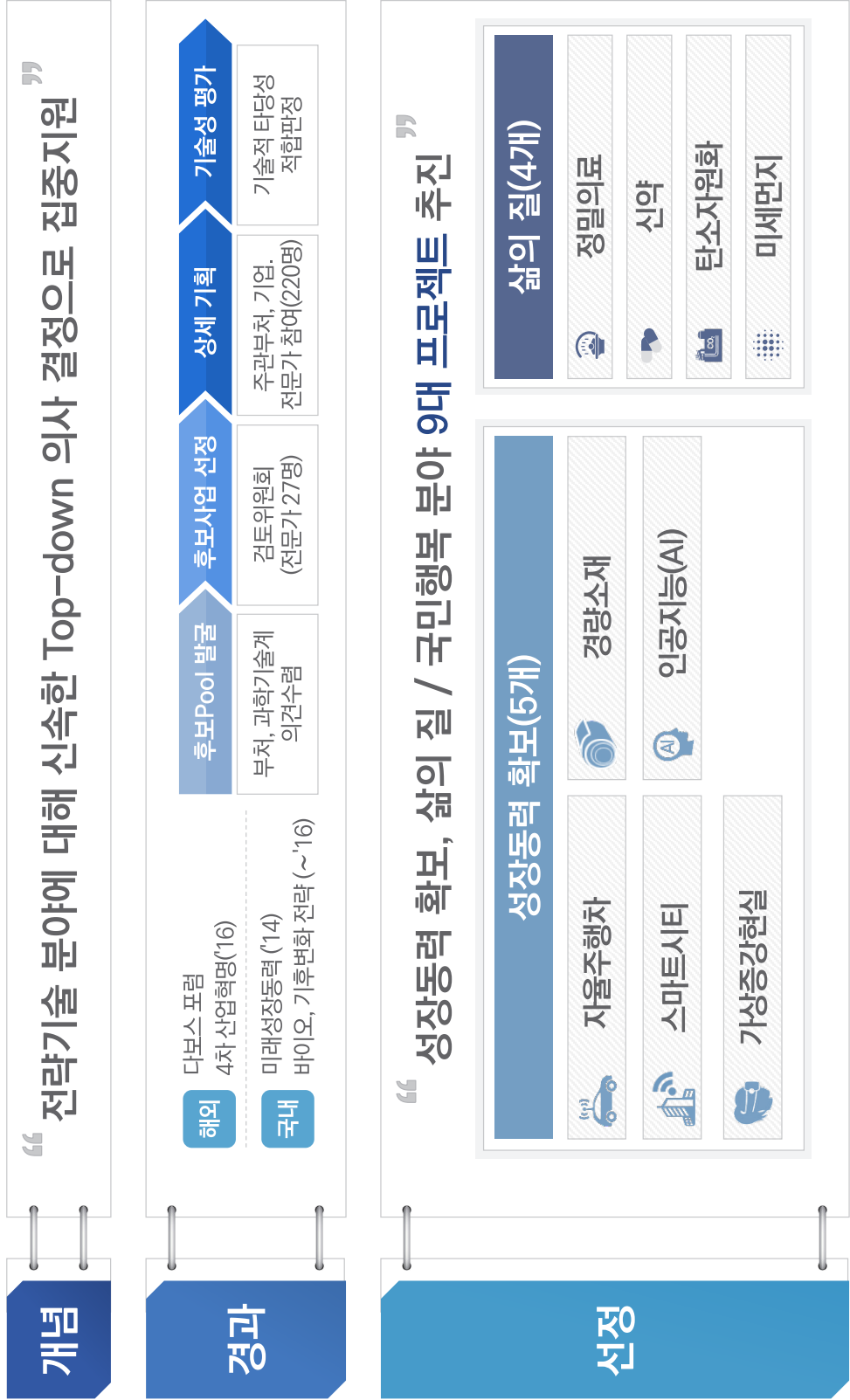


3.신기술·신산업 창출 : 미래성장동력 육성



스마트 자동차 등 10대 분야 상용화 집중지원(‘16년 하반기)
(R&D 세액공제 확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참고] 국가전략 프로젝트



3. 신기술·신산업 창출 : 기존 산업의 혁신

ICT 융합으로 기존산업 고도화

■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 비타민 A : 농업(Agriculture) + ICT → 스마트팜

- 비타민 H : 보건, 의료(Health) + ICT → 첨단 헬스테크

- 비타민 F : 금융(Finance) + ICT → 핀테크 등 **총 10대 분야**

'13~'16년 139개 프로젝트 추진, 3,000억원 투입

제조업 혁신 3.0

■ 中소 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20)

■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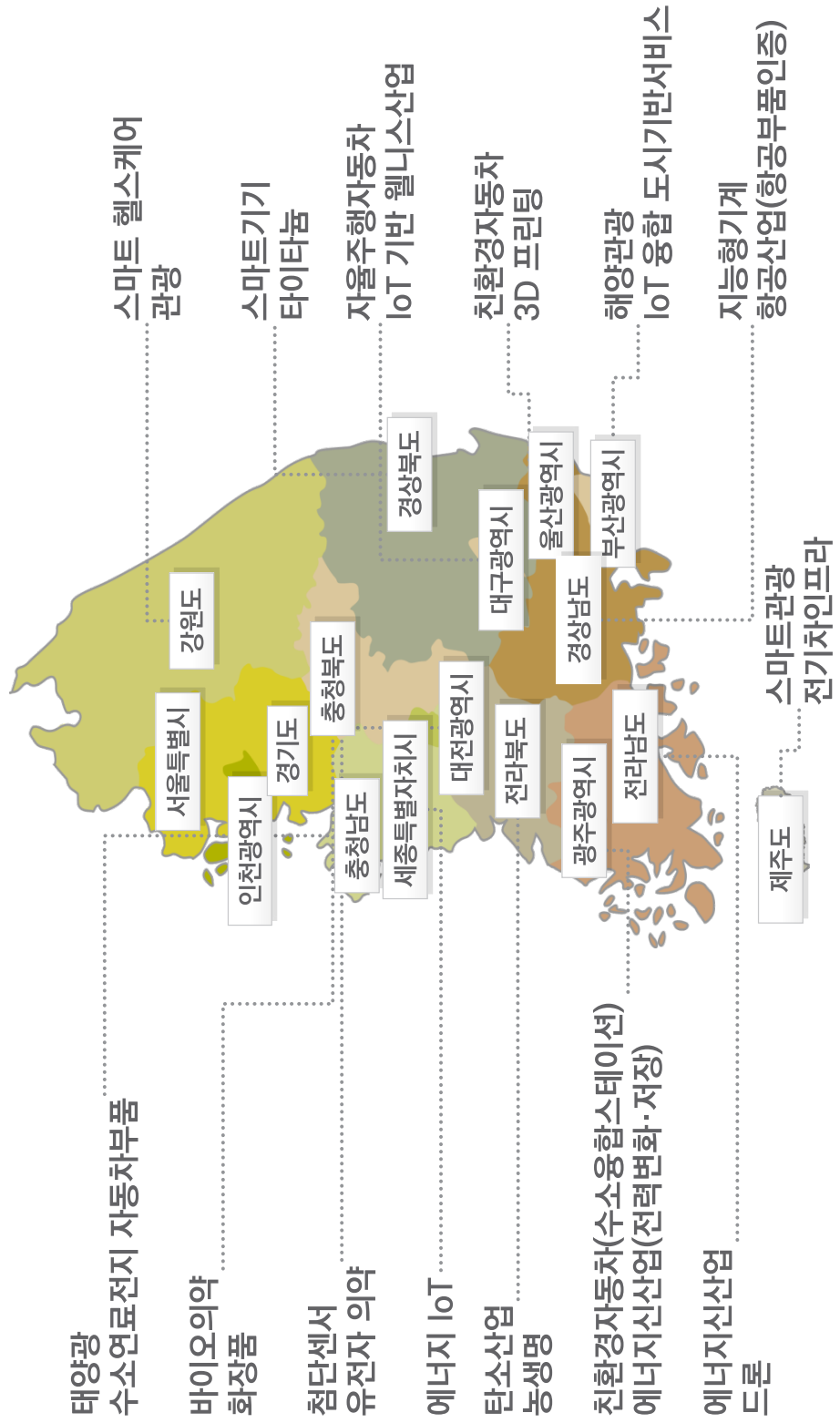
농업의 6차 산업화

■ 생산(1차) × 가공(2차) × 유통(3차) = 6차

주제발표 // 31

20

3. 신기술·신산업 창출 : 지역 전략산업 육성



규제프리존 도입,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지원('16 하반기)

4. 창조경제·문화융성 : 문화융성이란?

문화예술 진흥

-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상승 (문화영토 확장)
-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새로운 가치 창출

국민들의 문화향유 확대

-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수) 활성화
- 세대별 문화향유 프로그램 확대
- 실버세대 문화 향유 여건 조성

문화콘텐츠 산업화

- 한류 영역 확대(out bound , in bound)
-- 융합한류(한류+관광, 한류+상품수출 등)
-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운영
- K-Culture Valley (첨단문화 콘텐츠 콤플렉스)

+

창조경제와 융합

4. 창조경제·문화융성 : 문화창조융합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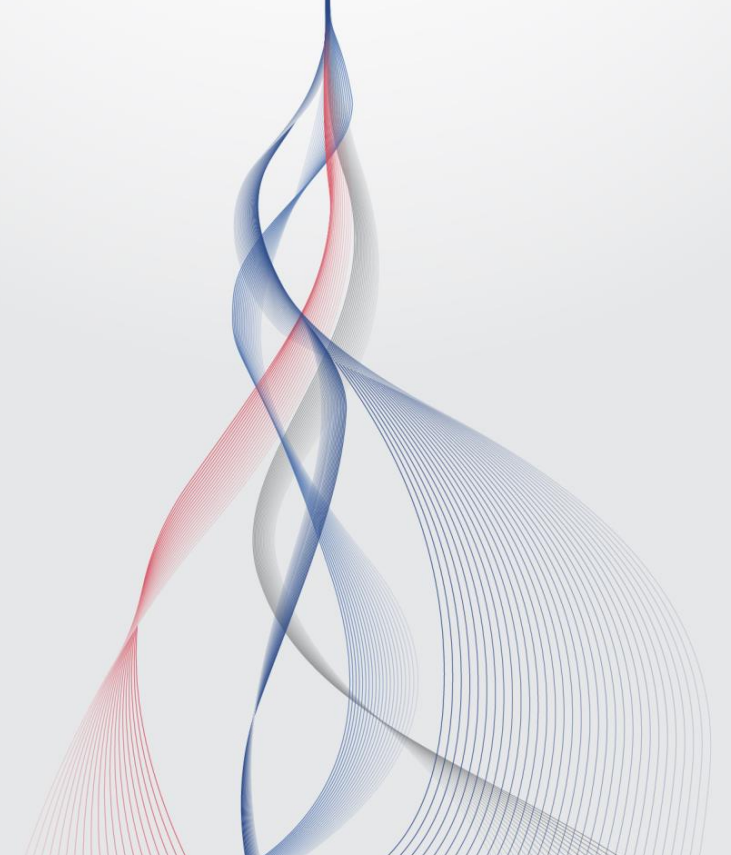
“ 문화 융복합 콘텐츠의 '기획 → 제작 → 구현 → 재투자' ”

“문화콘텐츠 산업은 다른 산업에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21 세기의 연금술사이자, 우리나라 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돕는 마중물 역할”

— 문화창조융합센터 개소식('15.2월) —



향후 추진과제



창조경제 플랫폼 공고화

“ 쉬운 창업과 기대를 넘는 성장, 상생 협력의 성과 창출 본격화 ”

쉽고 질 높은 창업

- 1 윈스톱 서비스와 전담기업
기술멘토링 활성화

멘토링

특허

법률

금융
- 2 창업 비용의 획기적 저감
(혁신센터 중심 아웃소싱 풀 확대)
※ 예시)美실리콘밸리 인터넛벤처
: (00) \$5M → (11) \$5K
- 3 재도전이 용이한 환경 조성

기대를 넘는 성장

- 1 성장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

멘토링

특허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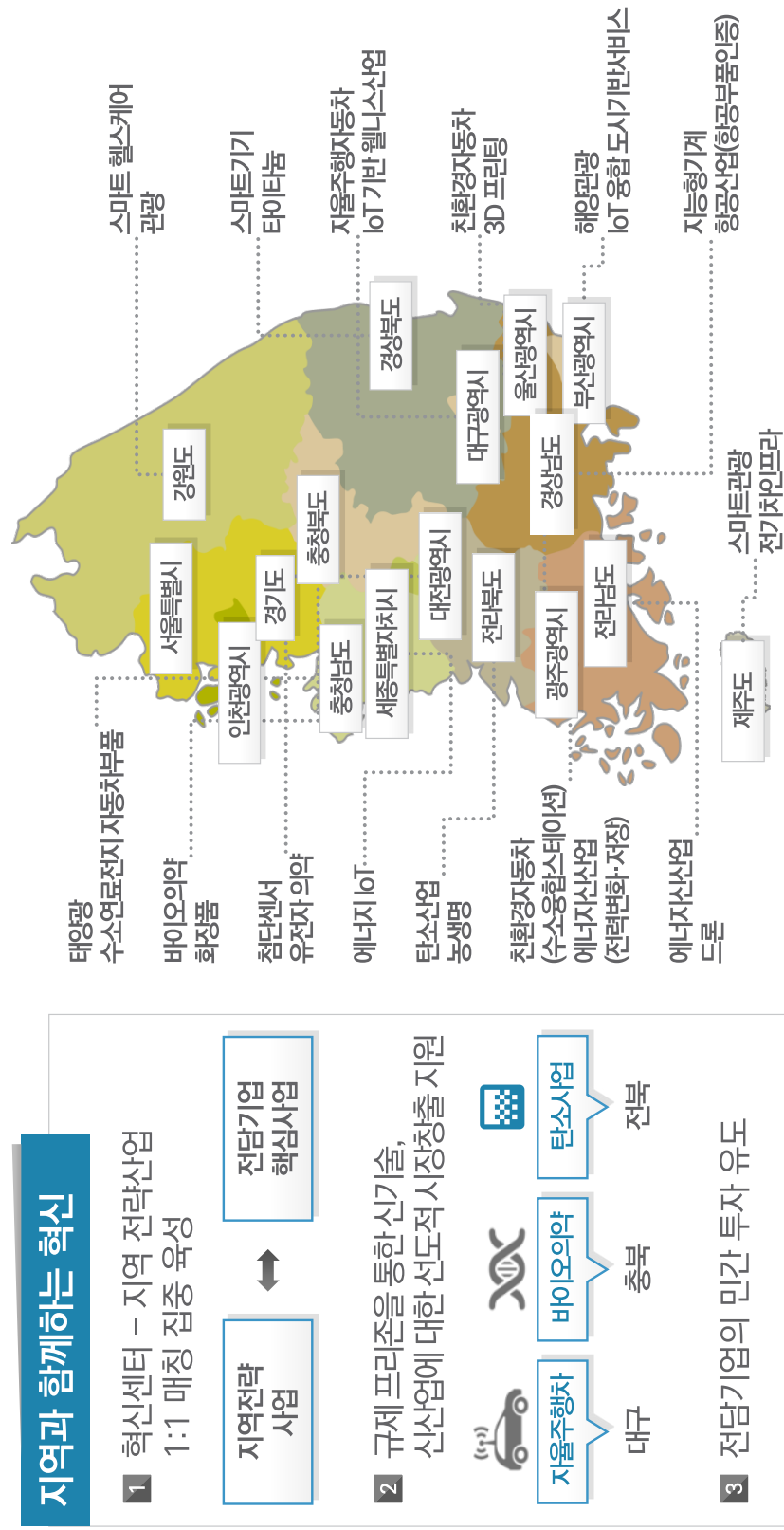
홍보·유통
- 2 적극적 투자 연계
※ 혁신센터 펀드, 민간 VC 연계,
크라우드펀딩 등

상생협력 모델 구축

- Win-Win Biz Model
 - 1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 “ (주)KPT와 LG생활건강 협업 사례
벤처의 아이디어와 대기업의
R&D, 마케팅 능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브랜드파워 형성 ”
- 
- 2 동반성장 투자 세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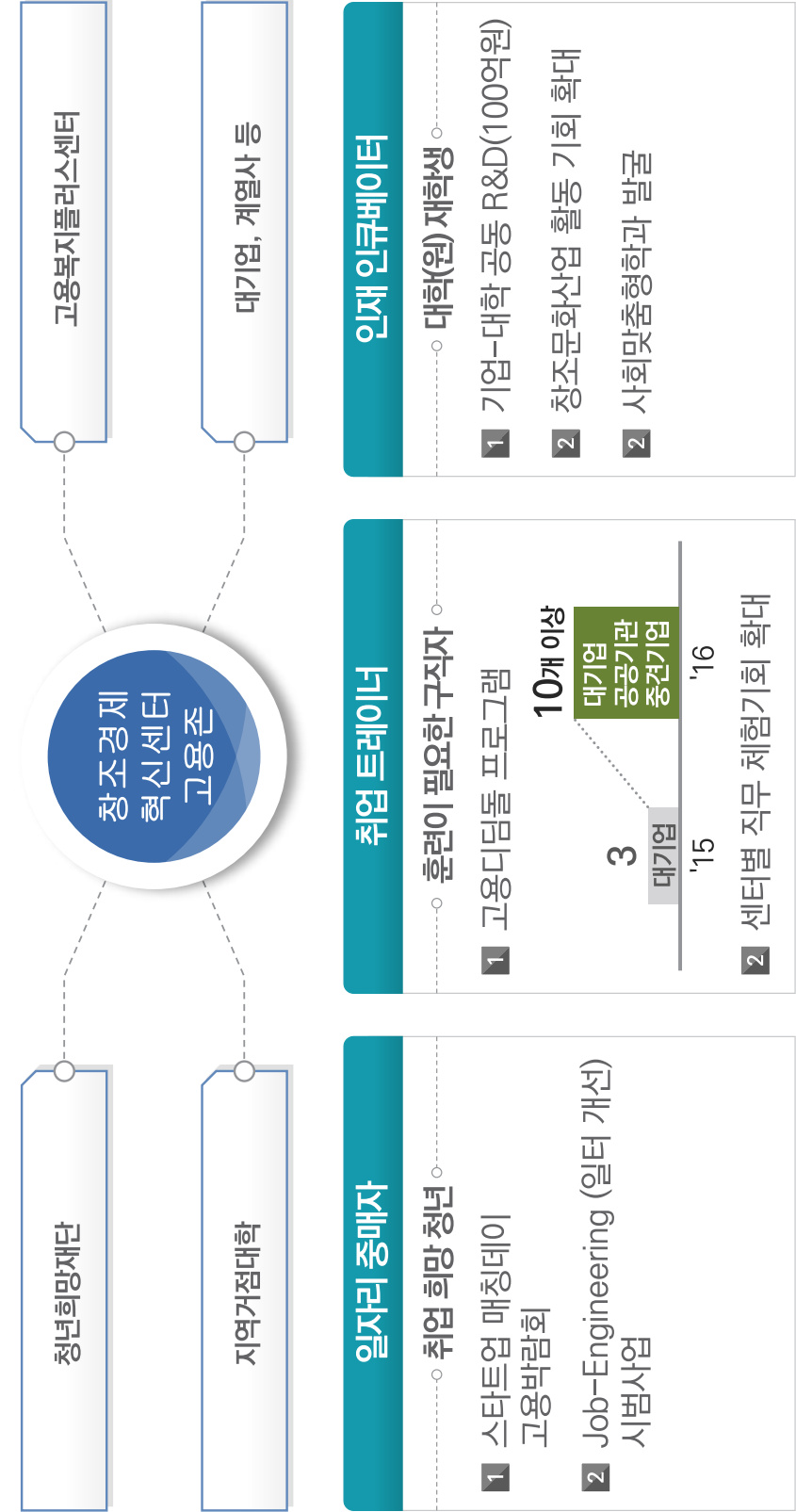
지역산업의 육성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전초기지로!”



청년 일자리 창출

“ 고용존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선도 ”



글로벌 진출 및 교류 활성화



감사합니다

창조경제와 창업·벤처 정책

2016. 9. 22



중소기업청

목 차

- I 4차 산업혁명과 창조경제
- II 창조경제와 창업·벤처의 중요성
- III 창업·벤처 육성 정책방향
- IV 창업·벤처 육성 주요 정책
- V 창업·벤처 육성 향후 정책과제

I. 4차 산업혁명과 창조경제

□ 4차 산업혁명

- 디지털 기기와 인간, 물리적 환경의 융합에 의한 산업혁명
- 유비쿼터스-모바일-인공지능 + 디지털-물리학-생물학



스마트카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U-헬스케어



I. 4차 산업혁명과 창조경제

□ 창조경제의 정의

- ✓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 ✓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하여,
→ 새로운 부가가치와 성장동력,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 국제사회도 창조경제 성장전략을 높이 평가

EU 글로벌 혁신 실적(1위), G20 성장전략 이행평가(2위)

→ 창조경제 정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패러다임

II. 창조경제와 창업·벤처의 중요성

- ✓ 정부는 글로벌 경제 위기 및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창조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
- ✓ 창업·벤처기업은 창조 경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

- 최근 4년간 창업기업을 통해 연평균 47만개사에서 132만명(전체 중소기업 1,188만명, 11.1%)의 신규 일자리 창출(한국창업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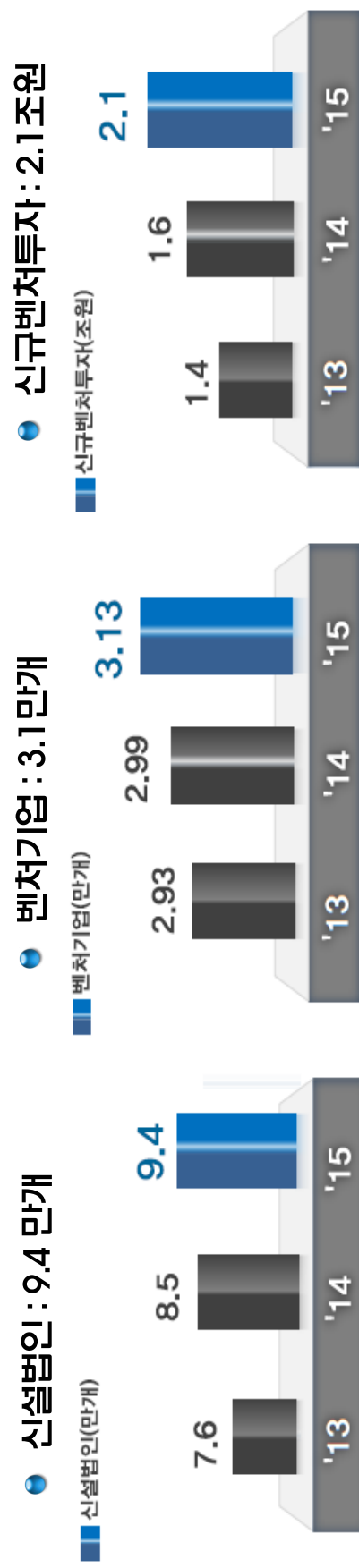
- 고용 증가율(2003~2013) :



〈참고〉 창업 · 벤처정책의 최근 3년간 주요 성과

-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13.5)을 비롯하여 10여차례의 대책을 통해 벤처 · 창업 활성화 추진
- ◆ 그간 업계에서 요구하던 법·제도 개선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창업 활성화, 벤처투자 확대 등 벤처생태계의 역동성이 제고
* 엔젤소특공제 확대, 기술혁신형 M&A 도입, 스톡옵션 양도소득세 납세 허용 등

[성과] 정부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창업 및 벤처투자 증가 등 성과도 가시화



III. 창업·벤처 육성 정책방향

✓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 가 활발한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선도



중점 과제

- 기술창업 및 글로벌 진출 촉진
 - 해외시장 지향형 고급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죽음의 계곡(창업 3 ~ 7년) 극복을 위해 창업도약기 지원 강화
- 가능성에 투자하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 맞춤형 벤처펀드 조성 및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회수시장 활성화
- 기업가 정신 확산 및 재도전 활성화
 - 창업교육을 내실화하여 기업가 정신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재창업 촉진 등 재도전 지원체계를 정비

IV. 창업 · 벤처 육성 주요 정책

1 고부가 기술창업 촉진

□ 유망기술 창업자 육성 확대

- ◆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맞춤형 기술창업 플랫폼」을 통해 유망 기술창업자 육성('15년 5천명 → '16년 6천명)

플랫폼	창업선도대학	창업사관학교	중견벤처연계	기타전문기관	계
지원 규모	900명	470명	375명	4,255명	6,000명

- ◆ 고급인력의 창업 촉진을 위해 엔젤투자사 등 민간 주도의 「TIPS 프로그램」 운영('15년 305억원, 133개팀 → '16년 548억원, 230개팀)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출신 엔젤투자사 등이 창업기업을 발굴·선투자후 정부 R&D자금 등 제공

- ◆ 창업도약기(창업 3 ~ 7년)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모델 개선 및 시장전문가 멘토링, 정책자금, R&D 등을 종합 지원

* 창업 창업사업화 지원 : ('15)50억원/100개 → ('16)100억원/200개

* 창업자금(지원) : ('15)1.3 → ('16)1.45 / 창업R&D(억원) : ('15)1,620 → ('16)1,888

IV. 창업 · 벤처 육성 주요 정책

□ 본 글로벌 창업 활성화

- ◆ 국내외 엑셀레이터, 벤처캐피탈(VC)을 통해 창업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
 - *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 ('15) 33억원, 62팀 → ('16) 100억원, 130개팀
- ◆ 대기업 자금 매칭, 해외 유통망 및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촉진
 -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 총 400억원(정부·민간 50% 매칭) / 400개 업체
- ◆ 해외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우수 기술창업 기업의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16.6, 미국 실리콘밸리 · 뉴욕, 영국 런던 등)
- ◆ 인지도 높은 해외 투자종개 사이트에 국내 우수 창업기업 등록 및 정보 제공
 - * 해외 투자종개 사이트 예시 : Kickstarter(美), Crunchbase(美) 등

IV. 창업 · 벤처 육성 주요 정책

2 가능성에 투자하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 맞춤형 펀드 조성 및 엔젤투자 활성화

◆ 모태펀드를 통해 창업초기·M&A 등 기업 특성별 맞춤형 투자재원 공급

*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펀드(子펀드)에 출자하는
母펀드(Fund of Funds), 중기청·미래부·문화부·특허청 등 8개 기관이 참여

< '16년도 모태펀드 출자계획 >

분야	창업초기펀드	외자유치펀드	M&A펀드	지방기업펀드
조성규모	1,600억원	1,800억원	2,000억원	400억원

- (창업초기) 청년창업펀드, 엔젤투자펀드, 마이크로 VC 펀드* 등
창업 초기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1,600억원)
*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5억원 이내로 소액 투자하는 펀드
- (글로벌 진출)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벤처캐피탈과 협력하여 외자유치펀드 조성(1,800억원)
- (회수) 인수·합병 촉진을 위해 M&A 전용 투자펀드 조성(2,000억원)
- (지방기업) 지방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기업펀드 조성(400억원)

IV. 창업 · 벤처 육성 주요 정책

◆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소득공제 가능한 투자대상 기업 확대

구 분	기 준	확 대
투자금액 중 소득공제 비율	30%	• 15백만원 이하 : 100% • 15백만원 ~ 50백만원 이하 : 50% • 50백만원 초과 : 30%
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	벤처 기업	• 벤처기업, 기술평가 우수 창업기업(3년 이내) • 연간 R&D 3천만원 이상 창업기업(3년 이내)

◆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16.1)

□ M&A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 ◆ 대기업이 중소 · 벤처기업 M&A시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 확대('16.1, 3년→7년)
- ◆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일몰시한 3년 연장('16.2, '15년→'18년)

* 벤처·이노비즈, R&D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30% 이상으로 M&A시, 기술가치(거래가-(시가×130%))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14.1, 조특법)

** (기존) 중소(매출 대비 R&D 5% 이상)·벤처·이노비즈 → (추가) 각 부처 기술인증기업(NET 등)

- ◆ 증권－중소기업간 M&A 축진을 위해, 증권기업이 중소기업의 M&A시 피인수 기업의 중소기업 통합을 3년간 유예('16.4)

IV. 창업 · 벤처 육성 주요 정책

3 기업가 정신 확산 및 재도전 활성화

□ 창업교육 확대 및 기업가정신 확산

- ◆ 초·중·고 창업교육을 담당하는 비즈쿨(Bizcool)과 대학생·일반인 대상으로 창업아카데미 운영

* 비즈쿨(Bizcool) : Business와 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

구 분	주요 내용
비즈쿨	▪ 창업·경제교육 및 창업동아리, 창업체험 및 창업실무 습득, 교재·콘텐츠 개발 등 지원('16년, 448개교, 20만명)
창업아카데미	▪ 대학생, 일반인(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전창업, 현장실습교육('16년, 25개 기관, 4,000명)

- ◆ 비즈쿨과 대학 창업교육 과정에 소자본 창업경험 프로그램 도입

* 시장조사 → 사업계획 수립·시제품 제작 → 법인 설립 → 평가 · 멘토링

- ◆ 국내외 벤처기업, VC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기업가정신 행사 개최

* 세계기업가정신총회('16.8), 세계기업가정신 주간행사('16.11)

IV. 창업 · 벤처 육성 주요 정책

□ 재도전 활성화

- ◆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및 기보의 연대보증 전면 면제('16.1)
-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기기업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
* 재창업자가 실패한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이 없이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재창업 지원
- ◆ 모범 재기 기업인과 유공자를 발굴 · 포상하고 귀감이 되는 실패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재도전의 날” 개최
-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확대 및 재도전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설계 지원
* 재도전 상담 → 컨설팅 및 교육 → 자금지원 등 사후관리 등 재도전 단계별 원스톱 지원
- ◆ ‘교육→멘토링→사업화’ 까지 일괄 제공하는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 운영 ('16년 53억원, 100개사)

V. 창업 · 벤처 육성 향후 정책과제

□ 창업·벤처 육성정책 패러다임 혁신

- ◆ 스타트업(start-up) → 도약·성장(scale-up) → 글로벌화(Global) 중심 재편
- ✓ 창업정책의 중심을 “저변 확산” → “도약·성장 (scale-up)” 으로 전환
- ✓ 아이디어·내수 위주 창업 → 기술 기반의 해외지향형 창업
- ✓ 위험분산형 창업생태계 조성 및 시장밀착형 육성체계 구축

□ 2017년 일몰에 따른 벤처특별법 전면개정

- ◆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근간인 “벤처특별법” 의 일몰시점(17.12.31)이 도래
- ✓ 그간 벤처정책 분석·평가, 일몰조항 존치여부, 벤처확인제도 재설계, 벤처투자자의 체계 정립, 벤처 글로벌화 등 생태계 개선·보완

□ 신산업 분야 창업규제의 회기적 개선

- ◆ 최근 O2O, 공유경제, 핀테크 등 IT 융합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창업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며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로 대두
- ✓ 신산업 분야 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체계적인 발굴 및 개선 체계 구축

이제 합시다!



토론

황보윤 국민대학교 교수

오승균 미래융합연구소 대표

장수진 JPD Big Data Institute 대표

황병선 빅뱅엔젤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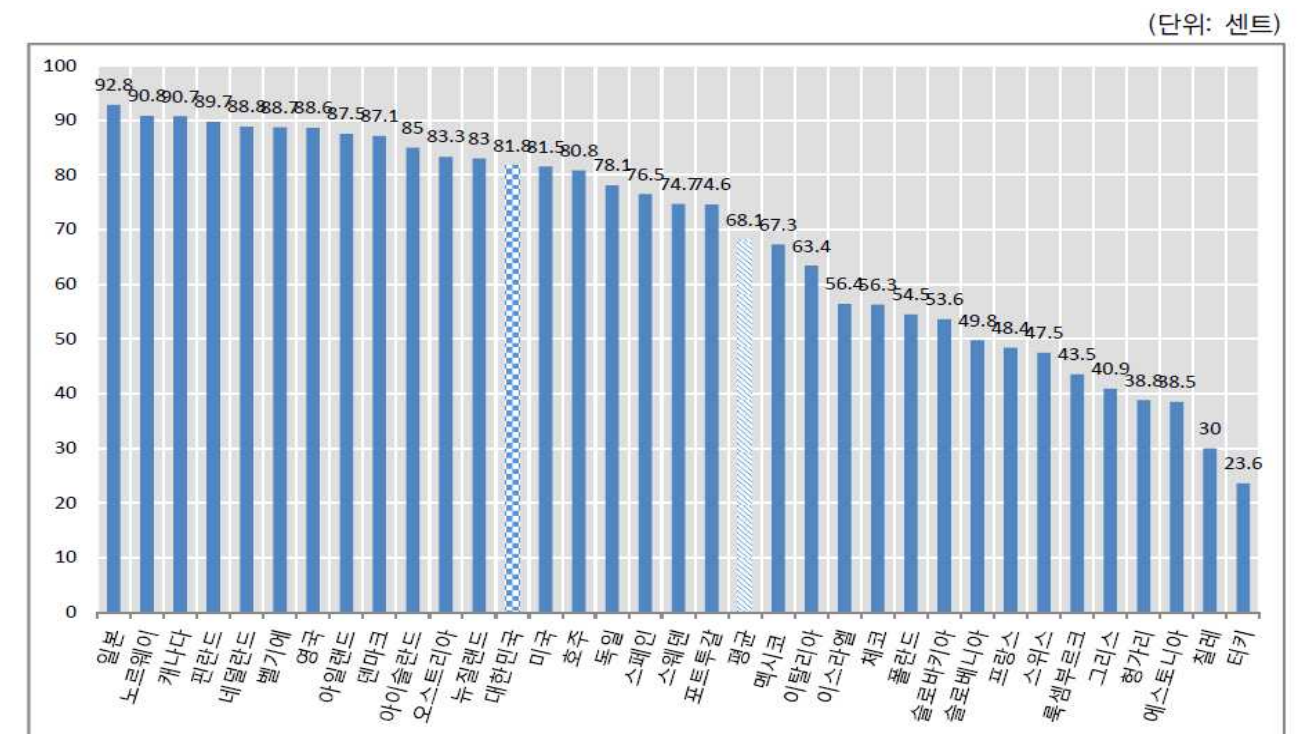
토론 1

황보윤 (국민대학교 교수)

□ 창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

-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제도의 부적절성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3년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에게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함
 - *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연 2.5%),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최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운전자금은 5년(거치기간 2년 이내)
 -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의 3년차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38.2%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3년미만 창업기업의 실패율은 61.8%로 대출에 따른 창업자의 상환 부담이 높을 것임

< OECD 국가의 파산 회복 비율 >



(출처) World Bank Doing Business

- 우리나라의 파산회복비율(bankruptcy recovery rate)은 2013년 기준 81.8%로 OECD 평균 68.1%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파산기업 채무자에 대한 부담이 커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 큼
- * 높은 파산회복비율은 파산기업의 채권자에게는 다양한 수단(자산의 유동화, 압류 등)을 동원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의미. 이는 채무자인 창업기업들의 재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표시

○ 창업지원 자금중 대출 비중의 과다로 사회적 비용 증대 우려

- 중소기업청의 최근 3개년 창업지원자금의 비중을 살펴보면 보조금 5%, R&D 지원금 9%, 대출(융자)금이 86%를 차지함.
- 창업 7년 미만기업들의 연차별 특징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보조금과 R&D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창업지원 자금의 3개년 비교 >

구분	세부사업명	3개년 간 예산 비교(백만원)					
		2014년(비중)		2015년(비중)		2016년(비중)	
보조금	창업저변확대	33,790	2%	41,794	3%	39,900	2%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42,221	3%	40,266	3%	40,266	3%
	소계	76,011	5%	82,060	5%	80,166	5%
대출(융자)	창업기업지원자금	1,290,000	86%	1,500,000	86%	1,450,000	86%
R&D	창업성장기술개발	141,361	9%	162,360	9%	188,811	9%
합계		1,507,372	100%	1,744,420	100%	1,718,977	100%

자료: 중소기업청(2016)

○ 벤처기업 인증 방법중 대출 비중이 과다함

- 벤처기업 유형별 최근 3개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벤처기업 인증 방법중 기술평가보증과 기술평가대출의 비중이 2014년 87%, 2015년 72%, 2016년 7월 69%로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전체 비중에서 아직도 70%에 가까움
- 벤처기업 인증은 창업자들이 정부지원사업 등에 신청시 가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엔젤투자 또는 전문 엔젤 투자시 필요 요건으로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은 필수요건처럼 신청하고 있는 실정임
- 벤처기업인증 방법으로 기술평가보증과 기술평가대출이 전체에서 70% 가까이 높은 비율의 문제는 창업후 1년 미만기업들의 경우 보증과 대출 금액으로부터 받은 8천만원에서 1억원의 금액이 사업실패시 고스란히 창업자의 부채로 남게됨. 이는 창업자의 재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 벤처기업 유형별 최근 3개년간 증감 추이 >

(단위: 개)

구분	'13	'14	'15	'16.7
전체 벤처기업 수	29,135	29,910	31,260	32,095
(증감)	·	(775)	(1,350)	(835)
벤처투자 유형	700	791	967	1,074
(증감)	·	(91)	(176)	(107)
연구개발 유형	1,497	1,511	1,713	1,872
(증감)	·	(14)	(202)	(159)
기술평가보증 유형	25,312	25,564	26,050	26,172
(증감)	·	(252)	(486)	(122)
기술평가대출 유형	1,558	1,978	2,459	2,911
(증감)	·	(420)	(481)	(452)
예비벤처 유형	68	66	71	66
(증감)	·	(△2)	(5)	(△5)

자료: 중소기업청(2016)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예산 대비 실적 저조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년 8월 26일자 기준 창업보육기업은 1,199개(입주510, 입주외 689)이며, 1,647억원의 매출 달성, 고용인원 1,443명, 투자 유치 2,442억원을 달성함

- 정부 예산은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295.32억원(2015년기준)이며 지자체의 예산도 정부예산 규모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정부가 25억원, 지방자치단체가 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총50억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과 유사한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의 경우 2015년 238억원 지원 예산 실적으로 보육업체 6,275개(전체 입주기업), 매출액 1조 7,330억원, 고용인원 18,536명, 투자 유치 금액 1,029억원임

< 창업보육센터 최근 3개년간 실적 >

구 분	'13년	'14년	'15년
지 원 예 산	257	204	238
보 육 업 체 수	5,511	6,254	6,275
매 출 액	16,416	15,840	17,330
고 용 인 원	16,630	18,290	18,536
투자금액 유치	245	569	1,029

- 정부지원 예산 규모만으로 비교해 볼 때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창업보육센터 대비 130% 예산이 더 많은 반면, 보육업체수와 매출액, 고용인원은 각각 19.1%, 9.5%, 7.8%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 투입대비 실적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창조경제 혁신센터(A)	창업보육센터(B)	A/B 비율
예산('15)	295억원	227억원	130%
보육업체수	1,199 (입주510,입주외689)	6,275 (전기업 입주)	19.1%
매 출 액	1,647억원	1조7,330억원	9.5%
고 용 인 원	1,443명	18,536명	7.8%
투자금액 유치	2,442억원	1,029억원	148%

* 창조경제혁신센터 실적은 2016년 8월 26일자 기준, 창업보육센터는 2015년 기준

□ 향후 개선 방향

○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보조금으로 점진 변경

-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중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은 창업 실패시 재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채 요인으로 남게 되므로 정부의 대출 지원을 보조금 지원 형태로 점차 변경 필요

○ 벤처기업 인증 방법중 기술평가 보증 및 대출을 대폭 축소 노력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벤처기업 인증 방법중 창업 실패시 창업자에게 심각한 부채의 부담을 안게 하는 기술평가 보증과 기술평가 대출 방법을 정부의 창업선도대학 아이템 사업화 지원 형태의 보조금 형태로 변경하고 창업 기업들의 벤처 인증 제도는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

○ 창업보육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거버넌스를 일원화 필요

- 17개 각 시도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국 268개 창업보육센터와 유기적인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거버넌스를 일원화하고 상호 장점을 활용한 협력 관계를 유도하여 예산의 효율성 증대 필요

○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은 무엇인가?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과연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은 무엇인가? 국가수준에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국내 8대 주력산업이었던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유, 철강 등이 순차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다. 국가수준에 산업을 재구조화하여 산업의 방향을 제공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은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산업구조의 변화는 직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국가수준에서 신성장동력 산업을 재구조화하여 창조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우리나라 융합경제생태계는 어떻게 조성하여야 하는가?

지난 1월 다보스포럼을 통해서 클라우드 슈밥은 IT 및 전자기술 등 디지털 혁명(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살아지는 기술융합혁명(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국가수준에서 융합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 예들 들어 물리학 기술 영역으로 3D프린팅, 로봇공학, 자율주행차 등, 디지털 기술 영역으로 IOT, 블록체인, 플랫폼 등. 생물학 기술 영역으로 유전학, 합성생물학, 생물공학 등으로 구분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지속 가능한 신성장동력 산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창조경제의 성공 전략의 한 축이 창업정책이다.

최근 창업 활성화로 다양한 창업정책과 교육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손에 잡히는 정책들의 결과들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 통해서 창업관련 뉴스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로 창업정책 통해 투자되는 고용률, 투자대비 매출은 아직 저조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체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좋은 결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정부가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고 생각된다.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너무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업 정책과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창업자들은 혼란스럽다.

창업정책 전반을 재점검하여 창업현장을 고려한 정책으로 추진될 때,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태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창업정책의 성공은 직업교육의 강화에 있다.

창업정책의 수요자는 누구인가? 청년층인가?, 장년층인가?, 시니어층인가? 창업 생태계 조성은 취업구조가 어려워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창업 정책의 성공은 먹거리와 같은 개업 수준이 아닌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3D프린터, 드론, 첨단로봇, 무인자동차 등과 같은 수준의 창업분야가 성장할 때, 고용창출은 물론 국가 경쟁력이 생긴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수준의 창업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학문위주의 교육에서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서만 창업이 가능하다.

이론중심 교육이 아닌 실무중심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을 경험할 수 있다. 청장년층의 창업자에게는 도전의식을 강화하여 생존하는 창업전략을 지원하고, 시니어 창업자에게 안정적으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실패율이 적은 창업지원 시스템을 국가차원에서 구축하였으면 한다.

○ 신성장동력과 창업의 중심에는 특별한 교육이 존재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존의 생산품 가공과 서비스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융합하는 산업으로 성장해 간다. 현재의 교육방식과 내용은 향후 5년 이후에는 전혀 불필요한 교육의 내용일 될 수도 있다.

3차 산업혁명까지는 선형적인 발전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산업발전을 피하므로 5년 이후에는 사라지는 직업부터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적인 지식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창의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교육들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거꾸로 교육이 활성화되듯이 창업자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전통적인 창업교육이 아닌 실전과 같은 현장성 있는 할 줄 아는 교육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미래직업과 교육까지도 고민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교육변화가 아니라 혁명 수준까지 요구할 수도 있다.

토론 3	장수진 (JPD Big Data Institute 대표)
-------------	--

- 2015년 창업 관련 정책자금 지원현황

중소기업청 창업지원 현황			
		금액(억원)	지원업체
창업보육센터		238	6275
		금액(억원)	지원업체
아이템 사업화		400	913
창업맞춤형사업화	2015년	423	737
청년창업사관학교	2015년	260	252
TIPS 수혜기업 지원	R&D	571	178
	창업사업화	83	178
총 계	직접투자비	1,737	2,258

업체당 지원금 : 약 7,700만원

(창업보육센터 지원금 제외)

1.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미래 국가 전략과제는 무엇인가?

1) 현 창업 정책 현황

- 현재 창조경제 정책에 따른 다각적인 정책지원 추진중
- 긍정요인 : 지역별 창업 인프라 및 지원 환경의 조성
- 부정요인 : 신규 소규모 창업자에게는 창업지원과 조건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 존재
- 개선요인 : 창업지원 목록의 단순화 및 원스톱 체제 구축
(신청은 단일화, 목적별 지원팀 배정-행정시스템)

2) 창업 정책 전략의 개선 검토사항

- 정책적 자금 지원사업화 -> 전략적 육성사업 지원 전환
- 중장기 국가 전략사업과 연계 (글로벌 플랫폼 기술과 지속적 관리 운영)

3) 정책 자금 지원현황의 빅데이터 분석 및 검증모델

- 지원 현황 전수조사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 기술평가와 자금집행, 기술관리의 독립적모델을 통합적 모델로 전환 검토 (지속 가능한 기술 융합 모델 창출)
- 기술 자금 지원 대상기업의 기술 개발 성과 모델의 검증과 연관 기술 산업과의 투자 크로스 매칭으로 신규 창업 생태계 산업 생성효과 유도

4) 창업 관련 성공사례의 재정의 및 재조명 필요성 대두

- 지속 가능한 기술 육성
- 지속 가능한 국가 기술 융합 산업 지원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재창출 정책 창출
(투자유치 및 M&A의 성공이 결과적인 성공인지 여부)

5) 경영지도 및 창업 컨설턴트의 단순 경영지도 정책의 변화

- 창업 지도 정책을 창조경영 전략 컨설팅”의 산업화 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영 전략과 기술기반 정책의 융합형 활성화 모색

(지식, 경험의 무형의 지원에서 직접 참여 지도와 성과 관리 유도)

- 신규 융합경제와 산업의 재창출로 인한 가치창조 인적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일자리 창조 정책으로 전환)

2. 국가적 미래 창조경영 전략 수립 및 실행 계획

1) 한국형 앙트레프레너 교육프로그램 및 개발

현재 창의 명분의 키워드식 사례중심의 교육에서 창조적 기업가정신의 실험 교육과정으로 전환
(전문적 소양에서 창조적 소양으로 전환)

2) 한국형 기업가 정신과 시대적 정신 함양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산업을 주도할 가치 중심의 인재개발 프로그램의 전환 필요성 대두(이미지트레이닝 기법)

3) 해외 학교용 스타트업 교육과 아이디어 시제품을 위한

글로벌 창의 교육과정의 본질적 문제점 검토

(모방형 체험 교육과 전략적 창조 인재 교육의 인식)

- 단순 미래변화와 창조자의 경험사례 중심의 이론적 키워드 정보 교육에서 탈피
- 실전 경험을 기초로 창조적 발상을 발굴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육성

4) 일자리 창출 중심정책 변화 : 신규산업 창출 전략(산업 창출)

- 단기 정책 전략과 중기 정책 전략의 분리 적용(산업 재분류)
- 중기 정책은 전략 정책과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 핵심(인재)
- 중기 정책 전략 완성을 위한 숙성의 시간, 중장기 전략 과정의 투명한 관리체계 운영
- 중기 정책 전략에 의한 산업의 변화에 대응 및 기술의 변화유도 (정책과 지원의 일관성 유지 및 공동 전략대응)
- 중장기 전략은 앙트레프레너 육성 전략이 핵심 과정
- 미래전략과 미래 산업 트렌드 변화는 복잡계 산업으로 전환이 예상됨으로 복잡계 빅데이터에 의한 분석 및 검증 연구 추진함 (창업 지원별 효율성, ROI 분석 시스템화-검증)

5) 일자리 창출 산업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의 필요성

- 창조 경영 전략 교육의 연구 및 검증 모델 재정립
 - . 직접적 정책 지원에서 전략적 인프라 지원
 - . 전략적 인프라 지원의 외형적 규모에서 내실화 재검토
 - . 융합적 실전 모델링 개발 (연구-실전모형)
- 각 창업관련 산업의 미래지향 마인드셋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 평가/검증 모델 개발
- . 창조형 정책 지원 대상자 및 공기업 리더 교육에 적용확대
- . 행정관료의 미래 정책의 실무적 추진 리더쉽은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중요 요소임으로 적극 확대 가능함

- . 창조 마인드셋의 객관적 평가 및 이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창조적 발상의 협업 및 마인드셋 지원 프로그램
- . 중장기 한국형 국가적 창조 마인드셋 모델 정립(중요)
 - i) 해외 학원형 창의교육과 실전적 창조형 산업주도 인재 교육의 명확한 구분 필요(전형적인 키워드 교육에서 탈피)
 - ii) 정신 교육형, 또는 사례중심형 창업교육에서 혁신적 실험 중심의 창조 산업 생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

3. 창업 정책과 국가 미래 정책의 선순환 과정

1) 학원 중심의 청년 창업 정책의 신규 모델 개발

- 대학 및 청년 창업의 정책적 지원 혜택과 문제점 분석
- 학원 중심의 아이디어 지식 거래소 구축
- 학원은 시장 창조형 제품과 소프트웨어로 구분(육성정책)
- 사업화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위한 플랫폼 지원
- 직접 지원모델 지양하고 간접 또는 융합 모델링 육성

2) 중장년층의 융합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교육

- 30/40대 연령별 창업정책과 20대 청년 창업의 융합 창업 지원 확대 및 개발
- 각 연령대 창업 지원자는 후견 연장자(경영 전략 후견인)를 조직에 참여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중장기 사업의 전문성 및 객관적 다각화 운영방식을 정책에 반영
(사례: 30대 창업지원자는 40대 후견인 Pool에서 매칭)

- 경영 전략 후견인 제도의 정책적 지원에 따른 객관적 사업 모니터링과 실질적인 협업 모델을 양성하기 위한 전략적 모델(전략 경영 후견인은 동일 업종 경력 및 동일 업종별 산업 컨설팅 교육과정 이수자만 해당)

- . 창업지원 자금의 관리 -> 50대, 60대 관리직 경력사원 활용 (재무, 회계 업무 10년 이상 재취업 대상자의 재취업 대상)

- . 공무적 행정관리의 한계를 실무형 민간 전문가에게 이관 (국가 미래전략 사업 모델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 50대 이상 경력자의 창업 연령 한계를 국가와 사회적 가치로 변환하여 협업 플랫폼 구축(후견 정책관의 경험과 연륜 재활용)

- . 창조 경제 혁신 센터의 창조형 교육과정 및 협업 플랫폼 거점 운영

- . 창업 지원자의 교육 이수과목

- 1) 기업가 정신과 미래전략
- 2) 데이터 분석과 미래 산업의 데이터 산업의 변화
- 3)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 및 평가 시스템 구축

4. 융합경제의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

1) 국내 경제 상황을 자영업나 일반인도 직감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거시적, 미시적 종합 경제 지표의 개발, 또는 기 서비스 제공 추진

- 국내 가장 흔한 경제지표로 코스피 지수나 환율 지표가 사용되지만, 경제상황을 판단하기에 부적합하며, 경제 성장률 역시도 국가 인프라 지표이기에 창업자나 소상공인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경제 상황을 판단할 지표가 부족하여 국민의 종합 경제 판단이 가능한 포괄적인 경제 지수의 필요성 대두

- 일일/주간/월간별 국내, 국외 경제 환경 변화를 점검할 수 있는 정기적 경제 동행지표가 절실한 시기이며, 불확실성과 불규칙한 경제상황을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생활형 경제지표의 제공은 경제 생태계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예측지표임

- 한국형 생활 경제지표 : 경제 빅데이터 지수

KOEPI (Korea composite Economic Positioning Indicator)

(참조 사이트 : www.koepi.kr)

. 일일 경제지수 / 주간 / 월간 / 년간

. 2016년부터 일일지표 생성

. 국내 경제지표 1호 특허지표 (2015년 10월 등록)

. 활용 : 국내 언론사 및 기업대상 서비스에 활용중

. 기술 및 저작권 보유 : (주) JPD 빅데이터 연구소

2) 향후 지역별 경제지표, 또는 지역별 소비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빅 데이터 경제지표 제공

○ 생계형 창업과 기술창업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

- 지금의 창업지원 정책을 보면 기존의 지역 기반의 생계형 창업 지원 정책과 별다른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중기청에서 제출한 국회요구자료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실적의 기준은 “3년간 생존율”, “매출액”, “고용인원” 등이다.
- 이는 생계형 창업자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생계형 창업자는 창업한 이후 빠른 시간내에 “매출”과 “고용”이 발생하며 지속적인 “생존력” 확보가 중요하다.
- 창조경제에서 얘기하는 창업이 경제구조를 혁신시키고, 사회에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면서 파급 효과가 큰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술창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창업일 것이다.
- 이런 창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어서 고객과 만나서 기업가가 가진 초기의 가정을 빠르게 검증하며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기업가정신”이며 “스타트업”의 방법론이다.

한국에서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1만개 중에 코스닥 등록 기업은 4%가 되지 않는다.

- 하지만 신문 기사를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가는 대부분 망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이런 염려때문에 정부의 실적 보고서에는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온다.
- 사람들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말하면서 그런 “혁신”이 수많은 실패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영국의 다이슨은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5년간 5,127회의 시제품 개발에 실패했다.
- 단기간에 생존율과 매출액을 평가하는 대신에 참여했던 인력이 다시 창업하는 비율을 평가한다든가 후속 투자나 작은 규모의 M&A라도 높이 평가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 기술창업 지원 자금이 모두 핵심 기술 개발에 사용되어야 하는가?

- 미래부는 2016년초에 2018년까지 가상현실 산업 육성에 1,8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가상현실 스타트업 “매직립”은 2015년 12월까지 1조의 투자를 유치했다.



MEMO

- 기술창업(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지원 자금의 경우 콘텐츠가 아니면 대부분 기술 개발 자금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출연연구소나 기업에서 오랜 기간 연구하던 기술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기술 창업회사가 개발할 기술은 핵심 기술보다는 응용 기술이나 제품이 대부분이다.
- 이슈는 이런 창업가를 위한 정부 지원 자금의 평가를 시장의 트렌드나 사업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기술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이다.
- 원천기술개발과 사업을 위한 제품/서비스의 개발은 기술의 수준의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원천기술개발이 아닌 창업지원 자금의 평가를 기술 관점에 보다 중심을 두는 것이 개선이 필요하다.
- 이는 실제로 각종 투자연계형 사업에서도 볼 수 있는데,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가 시장성을 평가하고 실제 현금을 투자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기술지원 자금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재고가 필요하다.

[illegible]

[illegible]